

Hansun Brief

발행일: 2021년 11월 19일(통권197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기획시리즈1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개념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 차

1. 기본소득 개념
2. 음의 소득세 개념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1.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많은 문헌들은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미국의 작가이자 국제적 혁명 이론가로 알려진 토마스 페인(T. Paine, 1737-1809)의 『농업의 정의(1796)』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기금을 통하여 21살 이상 국민 모두에게 15파운드, 50세 이상 국민에게 10파운드를 매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또는 토마스 무어(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농업의 정의(1516)』에서 기원을 찾는 학자도 있다.

기본소득 정책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스탠퍼드 대학의 기본소득 랩(Basic Income Lab)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보편적 기본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0년 제13차 BIEN 총회에서 1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되었다.

2)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BIEN, <https://basicincome.org/>, 검색일: 2021. 10. 21.).

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지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위의 두 정의를 보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 개인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갖는다.

첫째, 정기성(periodic)이다. 소득은 비정기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지급되어야 한다. 즉,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금인 알래스카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의 수익금 배당이 있다. 그러나 배당금 액수는 많지 않아, 2021년 지급액은 1,114달러(약 128만 원)으로 월 11만 원에 불과하다.

둘째, 현금으로 지급(cash transfers)되어야 한다. 쿠폰(coupon)이나 바우처(voucher)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셋째, 가구(household)가 아닌 개인(individual)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다른 구성원의 수입이 없다면 이 사람은 가난하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많은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넷째, 보편성(universal)이고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이다. 노동여부나 재산보유와 같은 개인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즉, 자산이나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에

3) Universal Basic Income (UBI) consists of a periodic cash allowance given to all citizens, without means test to provide them with a standard of living above the poverty line(Stanford Basic Income Lab, <https://ethicsinsociety.stanford.edu/research-outreach/basic-income-lab-bil>, 검색일: 2021.10.21.).

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혹은 고소득층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충분성(adequacy)이다. 충분성은 인간이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최저생계비(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정책 시행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준을 일종의 최저생계비(poverty line)라고 하자. 우리나라는 이를 중위소득의 30%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1,827,831원으로, 월 생계급여는 548,349원이 되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658만 원이 된다. 따라서 충분성이 보장되려면 연 658만 원이 보장되어야 한다.⁴⁾

2. 음의 소득세 개념

보편적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선택적 복지 개념으로 제시되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이다. 음의 소득세는 1940년대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J. Rhys-Williams)가 주장하고, 196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의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제안되었다. 이를 Tobin(1965)이 구체화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음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조세를

4)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이 없다고 할 때 알래스카 주의 배당금(월 11만 원)이나 국내 기본소득론자들의 월 30만원 정기적 지급은 이러한 충분성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제도와 동일하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사람에게는 소득을 지원(보조금 혹은 음의 소득)해주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제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조세제도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일종의 복지정책과 연계된다. 따라서 음의 소득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음의 소득세 모델을 수식으로 간단히 보자.⁵⁾ 여기서 Y 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세전소득으로 기본소득인 Y_0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하고, 그 이하이면 보조금 즉, 음의 소득세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음의 소득세 제도는 기본소득제의 성격을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음의 소득세율을 40%라고 가정하자. 세전소득인 Y 가 Y_0 보다 크다면 세금을 납부한다. 납부액은 $T = 0.4(Y - Y_0)$ 가 되어,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Y_D = Y - T = Y - 0.4(Y - Y_0)$ 이 된다. 반대로 Y 가 Y_0 보다 낮으면 부족분의 40%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만약, 소득이 0이면 $0.4Y_0$ 만큼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 정신과 부합한다. 예를 들어, Y_0 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의 세전소득자는 그 격차인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식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식 (1)과 같다.

$$Y_D = Y - 0.4(Y - Y_0) = 0.4Y_0 + 0.6Y \quad (1)$$

5) 옥동석(2021)은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제도는 빈곤의 함정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은 모두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재원이라면 음의 소득세가 기본소득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김원식(2021)은 또 다른 주장으로 기본소득제도 보다 기초사회서비스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식 (1)을 보면 ‘음의 소득세’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0.4Y_0$ 만큼 지급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Y)의 60%를 처분가능소득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40%는 세금을 징수한다.

음의 소득세와 기존의 조세체제 및 사회복지체계를 비교하면, Y_0 의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체계가 Y_0 이하의 계층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 사회복지정책 구조가 음의 소득세 제도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의 소득세 제도에 의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집행된다면 기존 사회복지체계에 의한 지원제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